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후진국 간 마찰 해소방안 연구- GSP 도입가능성  
A Study on the Eliminating friction over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 Focusing on the Potential of GSP Introduction

김민철 · 박성환 · 박중구

서울산업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본 연구는 2012년 종료예정인 교토협약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선·후진국 간의 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해 열린 코펜하겐회의에서도 후진국은 선진국에게 1990년 대비 25-40%의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면서 선진국 GDP의 0.5%수준인 2,500억 달러 규모의 대후진국 재정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선진국들은 후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사정으로 인해 CO2 절감에 대한 선후진국간의 의견차이가 무역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내지 감소와 연계한 국경조정 조치나 보조금 지급 등의 해결책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출국 내지 수입국 중 피해를 입게 되는 쪽이 나타나 현 시점에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잘 이행하는 후진국에게 선진국이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한다.

선후진국의 구분 방법으로는 현재 UNCTAD의 GSP공여국이 아닌 코펜하겐회의상의 선후진국 구분 기준에 따른다. 또한 1996년 김남두 교수의 선행연구의 방법론에 따라 선후진국간 협력 유도 방안으로의 GSP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1970년대 이후 GSP 공여를 잘 활용한 한국의 과거 사례를 연구하고 현 수출산업현황을 통해 보았을 때의 GSP 도입여건을 예견해본다. 현재 100여개국의 개도국에 GSP를 적용하는 미국과 EC의 도입여건도 한국과 비교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연동한 GSP 관리기구 설립과 배출량 측정의 선진화도 동시에 고려한다.

이 논문은 기대효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GSP제도 도입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요소를 다루고 있어 공여국과 수혜국의 편익, 비용을 추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이 구체화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출입품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이전 정도가 정확하게 잡힌다면 많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함축할 수 있는 선구적인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